

농산물 비축했다 수요 증가 땀 방출... 가격 안정화 역할 '톡톡'

현장르포

aT 이천비축기지

최적의 품질 보관... 최장 3년까지
창고 저장용량 80% 이상 저온창고
보관기간 경과 등에 방출 못하기도
폐기물량 감축 위한 개선방안으로
분할 수매·산지 직출하 확대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 콩 보관 창고 내부

/한용수 기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이천비축기지는 콩과 밀, 배추, 무 등 정부 비축농산물이 보관된 국내 14개 비축기지 중 최대 규모다. 부지면적 16만㎡, 보관 면적은 1만9780㎡에 달해,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수매해 비축하고,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방출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일 방문한 이천비축기지 콩 보관 창고에 들어서자, 한기가 밀려왔다.

김영백이천비축기지 관리소장은 "최적의 품질로 보관하기 위해 저장고 온도는 10℃ 정도로 유지한다"면서 "최장 3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관 품목이 수분이 있는 농산물이다 보니 품목별 보관 온도와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조마늘, 참깨, 콩, 팥, 녹두 등은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보관해야하고 최대 보관

기간은 품목별 24개월~60개월까지다. 수분이 많은 배추나 무의 경우 보관기간이 가장 짧다. 0도 내외 습도 90% 조건으로 보관해도 최장 4~5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천비축기지 창고 저장용량 중 80% 이상인 약 1만6500㎡는 저온 창고다.

10월 31일 기준, 콩 2274톤, 참깨 1946톤, 콩나물 콩 1845톤을 비롯해

밀, 팥, 감자, 건고추, 무 등 총 8482톤을 보관 중이다. 지난해 기준 2만여톤이 입고됐고 2만2000여톤이 출고되는 등 연간 4만3000여톤이 입·출고되며, 대형 트럭 5382대가 드나들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창국 aT 수급관리처장은 일본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매 농산물 폐기도 농산물 수급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30% 가격이 하락해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비축 농산물 3만톤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폐기물량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aT는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수확기 기간별 물량을 배정해 수매하는 분할수매를 도입해 생산량 회복 등 수급여건 개선시 잔여물량 미수매로 인한 폐기를 줄이고, 고랭지배추 등 품위변화가 빠른 품목은 산지 직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3000톤 규모 예냉 전처리 및 전문 비축기지를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조절시설 등 민간 수급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생산량이 많으면 안정을 위해 수매하고 시장가격리를 시켜야 한다"며 "어느나라나 시장가격리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과잉 생산되는 물량을 어느정도 폐기처분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자금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2013년~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 등 4대 권역의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작업을 완료해 총 보관능력을 10만톤으로 늘려 비축물자의 보관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김 사장은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을 다량 수매 보관하고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식량자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곡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설치 등 미래 식량안보 강화에 앞장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부산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유치 성과 공유·투자 환경 제시
실질적·맞춤형 투자상담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6일~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인베스트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에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우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022년 305억불, 2023년 3분기 누계 239억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 행사인 IK 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MAT 옴카람 나라마수 CTO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국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르노·유미코아·램리서치·에퀴노르 등 글로벌 첨단기업은 한국 진출 경험을 발표한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 투자 상담이 이뤄진다.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글로벌 앵커기업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실시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되고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해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투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해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투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中 국제수입박람회, 韓 '역대최대' 참가

총 212개 기업 참여

중국 최대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이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 사절단으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



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한다. 우리나라 참가 기업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가 4년 만에 박람회 현장에 참석한다. 양 차관보는 5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상하이 소재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편법 지급보증 회피 적발

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참관 가능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 16일 공

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